

한국의 동남아연구: 반성적 회고

신 윤 환*

I. 문제의 제기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어느덧 반세기라는 짧지 않은 연륜을 쌓으면서 연구자의 수와 연구성과의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일구어내었다. 한국동남아학회와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는 중요한 연구단체로 떠올랐으며, 몇몇 대학부설 연구소들은 규모 있는 공동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동남아지역연구는 기성 대학과 학과가 인정하는 분야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동남아전공자들은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다양한 인문사회계열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의 동남아 관련 학과들은 대학의 위기를 모르는 듯 높은 입학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다.

동남아연구의 ‘비약적’ 성장에 주목한 몇몇 연구자들은 한국 동남아연구의 성과를 소개하고 현황을 파악하며 그 동향과 경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은 동남아연구가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동남아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동남아시아연구』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창간호(1992년)부터 제10호(2000년)까지 매년 1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간행되다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

*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yhshin@sogang.ac.kr

2회, 2009년부터 2013까지 연 3회, 그리고 2014년 이후 연 4회가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어, 눈부실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회 도서관 소장 도서들을 동남아와 나라 이름으로 검색해 보면, 동남아를 주제로 한 단행본 수도 학술지 게재 논문 수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동남아관련 출판물 수

종류 기간	단행본 · 보고서		학술지 게재 논문1)	
	5년 합계	연평균	5년 합계	연평균
1990-1994	125	25	50	10
1995-1999	162	32	50	10
2000-2004	211	40	124	25
2005-2009	309	62	139	28
2010-20142)	459	96	205	41

출처: 필자의 집계.

주: 1) 『동남아시아연구』(한국동남아학회), 『국제 · 지역연구』(서울대국제학대학원), 『국제지역연구』(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동아연구』(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아세아연구』(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수완나부미』(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아시아리뷰』(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게재된 동남아를 주제로 한 논문 편수.

2) 단행본, 보고서의 경우 2014년 9월까지 검색된 결과만 포함하였음.

그러나 앞선 비평가들 대부분 동남아연구가 그러한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질적인 발전’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성적 평가를 시도한 소수 연구자들도 연구자의 비전문성, 2차자료 의존, 이론적 무관심, 방법론적 취약성 등 일반적인 문제점을 막연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 연구성과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근거로 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그 ‘질적인 발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를 나름대로 시도해 보았다. 필자의 분석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된 동남아를

주제로 한 단행본과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동남아 관련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성과의 유용성이나 사회적 기여도와 같은 ‘현실적 가치’를 따져 보았다. 연구성과물의 양적 방대함과 분과적 다양성 탓에 필자 또한 개별적 논문들에 대한 엄밀한 내용분석까지는 시도하지 못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인 현실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연구의 목적, 주제, 내용, 이론적·방법론적 경향과 정책적 함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동남아연구에 대한 반성적 회고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동남아 지역연구가, 다른 지역연구와 다를 바 없이, 국가, 자본, 세계화, 시류와 같이 ‘패권적 담론’을 만들어 낸 엄청난 힘에 포획되고 말았음을 자성하는 연구이다. 설사 우리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심지어는 의식적으로, 권력과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할 지라도, 보이지 않는 패권(hegemony)의 파괴력과 창조력은 어느새 한국 동남아연구자들의 지식체계를 장악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맑스주의나 비판이론의 전통을 강한 우리의 지적 풍토 속에서 우리의 동남아연구가 패권적 경향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는 현상은 우려와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의 문제의식은 동남아 국가들이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제반 영역에서 많은 모순과 문제점에 당면해 있고, 한국과 동남아 관계 역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본격적으로 분석, 비판한 연구가 희소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II. 기존의 평가분석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것에 상응하

여 그 성과를 검토한 연구 또한 적지 않게 수행되었다. 실은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학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논의하고 많은 중진 학자들이 성과를 분석하는 논문을 게재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의 동남아 연구가 그 실질적 성과에 비해 과분할 정도의 조명을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¹⁾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박승우(2009)와 전제성(2006, 2010, 2014)은 연구자와 연구성과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자들의 세대를 둘 또는 셋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들을 잡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박승우(2009)는 동남아지역 전공자들의 교육배경, 연구관심 및 연구성과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 무척 흥미롭다. 연구자 수의 증가와 연구영역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질적 수준을 좀 더 제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전제성(2006)은 박승우보다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에서 그간 동남아연구의 “질적 성장”을 평가하고 장차 “유기적 지식”과 “국제관계·지역”전문성을 갖춘 “제3세대” “한국형 동남아전문가”의 출현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제성(2010)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동남아연구의 출현과 발전에 정치학자들이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국제정치학회의 학회지인 『국제정치논총』에 알리고 홍보하였다.

정치학 분야와 달리 늦게 전공자들이 출현한 인류학 분야는 연구자 및 연구성과물의 양적 성장이 특히 두드러진다. 1990년까지 동남아를 전공한 박사학위 취득자가 단 1명도 없었던 인류학은 1998년까지 3명, 2008년에는 모두 11명의 박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2008년 인류학 분야에서 동남아전공자들이 이룬 연구성과를 평가한 오명석,

1) 한국동남아학회와 학술회의와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를 통해 한국의 동남아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한 것만 해도 오명석 외(2008), 박승우(2009), 나희량(2012)이 있다.

김형준, 최호림은 “동종교배”의 위험성, 연구주제의 편향성, 이론적 관심의 부족, 비교문화 연구의 결여를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빠르게 늘어난 연구자 수, 다양한 유학 배경, 왕성한 연구활동에 비추어 국내 동남아 인류학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오명석 외 2008).²⁾

자신들의 분야에서 출판된 연구성과물들을 가장 잘 정리해 놓고 있는 동남아전공자들은 문헌학적 방법을 중시하는 역사학자들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들은 1985년 이래 무려 12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역사학 분야의 동남아연구 성과들을 『역사학보』에 소개하였는데,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막론하고 역사에 관련된 모든 논문과 저서들을 ‘살살이’ 뒤져 잘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문헌학적 가치가 있다. 거의 모든 동남아전공 역사학자들이 번갈아 가며 집필자로 나서 작성한 이 “비평논문”들은 성과물들을 주제별이나 국가별로 정리하고 소개하는 선에서 멈추고 정도를 넘어서는 ‘비판’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이 흥미롭다. 이런 점에서 동남아역사 전공자들 역시 어떤 연구성과물이든 의미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듯하다.

경제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남아전문가들은 인류학이나 역사학 전공자들보다도 더 수가 적지만, 이들에 못지않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생산적인 집단이다. 또한 이 분야는 국가와 기업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국책연구소의 활약에 힘입어 가장 많은 수의 그리고 가장 다양한 종류의 성과물들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다. 통계 등 기초자료를 정리한 자료집, 투자와 교역에 필요한 종합 정보를 담은 시장조사

2) 이상의 두 문단에서 인용한 박승우(2009), 전제성(2006), 오명석 외(2008)의 분석은 동남아학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전문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동남아관련 출판물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도한 역사학자들(윤대영 등)과 경제학자들(박변순, 나희량)뿐만 아니라 필자의 본 연구와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바로 이 분석대상의 차이야말로 전자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후자의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해 준 익명의 비평자에게 감사한다.

국별 시리즈, 총론적 성격의 현지경제 연구, 무엇보다도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 시장, 산업에 대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성향의 보고서들이 대중을 이루고, 이런 종류의 ‘연구’는 주로 비동남아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경제성장, 발전전략, 산업정책,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등 동남아 국가들의 거시경제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경제학자가 아닌 정치경제를 전공하는 정치학자나 여타 사회과학자들에 수행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소수의 ‘진정한’ 동남아전공의 ‘정통’ 경제학자들은 그간 경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적지 않은 연구성과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연구나 정책성 연구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물론이고(박변순 2011), 동남아경제 관련 연구가 주류 경제학 학술지에 거의 게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류 경제학계의 “오만”과 동남아연구의 방법론적 취약성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나희량 2012).

요컨대 상기 비평가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동남아연구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연구성과 역시 양적으로 급팽창하였다는 사실을 공히 인정하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남아연구가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그간의 연구성과가 이론적 무관심과 방법론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간단히 언급할 뿐, 어느 비평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명확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기존의 평가 작업들은 과거의 연구성과들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서술적으로 정리, 분류하는 데는 충실하였으나,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필자는 동남아연구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룬 괄목할만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자아비판을 외면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엄정한 학자나 비평가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라고 제안한다. 자성적 비판의 회피는 동료학자들의 연구에 대하여

지나치게 너그러운 한국 학계의 전반적인 풍토와 전철을 한국 동남아학계도 그대로 밟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의 지역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해 온 우리 동남아연구는 지금까지 ‘이론’ 성과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루지 못한’ 것과 ‘소홀히 한’ 것도 반성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Ⅲ. 연구의 방법과 자료

필자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출판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시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로 연구자에 대한 배경 분석과 연구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머물렀던 기존의 평가 작업들과 달리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존의 평가들이 주목한 연구성과물은 역사학과 경제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로 한정하였고, 주로 연구대상이 된 국가와 연구주제를 분류하고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서술적’ 분석에 그쳤지만, 필자의 분석은 연구성과물의 범위를 단행본과 다양한 학술지로 확대하여 그 흐름과 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한국 동남아연구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다음 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질적 평가를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요하는 ‘학술적’ 가치보다는 지역연구가 수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단행본은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목록에서 동남아 및 아세안 그리고 11개 동남아 국가 이름으로 검색되는 1990년 이후 출판된 모든 저서를 망라하였다. 검색된 총 1266권의 단행본 중에는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NGO 등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또

한 연구경향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표 2> 동남아 연구논문 게재 학술지 목록

구분	동남아 전문	지역연구 및 아시아 일반	전통분과학문 대표
학술지	『동남아시아연구』 (한국동남아학회, 1992)	『아세아문제』(고대아세아 문제연구소, 1958)	『정치학회보』
	『동남아연구』 (한국외대동남아연구소, 1991)	『동아연구』 (서강대동아연구소, 1982)	『국제정치논총』
	『수완나부미』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2009-2013)	『국제·지역연구』 (서울대국제대학원, 1992)	『한국문화인류 학』
	<i>Trans-Regional and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TRaNS)</i> (SIEAS-Sogang Univ. 2013)	『국제지역연구』 (서울대국제대학원, 1992)	『비교문화연구』
<i>Suvannabhumi</i> (ISEAS-BUFS, 2014)	『국제지역연구』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 터, 1997)	『역사학보』	
	『아시아리뷰』 (서울대아시아연구소, 2011)	『동양사학연구』	
	<i>Journal of International & Area Studies</i> (GSIS-SNU, 1994)	『국제경제연구』	
	<i>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i> (CIAS-HUFS, 1997)	『국제통상연구』	

출처: 필자의 집계.

단행본보다 학술적으로 더 가치 있는 자료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남아 전문 학회와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국내에서 출판되는 동남아 전문 학술지로는 한국동남아학회가 발간하는

『동남아시아연구』,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이 2009년에 창간한 『수완나부미』(*Suvannabhumi*)와 동아연구소가 케임브리지대학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는 *Trans-Regional and-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TRaNS)*가 있다.³⁾ 이 중에서 2014년 이후 *Subannabhumi*와 *TRaNS*는 한국학자의 논문을 단 한편도 실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창간 이후 5년 동안 다국어로 출판한 『수완나부미』는 한글로 된 순수 연구논문을 총 17편 게재하였으며, 이 중 14편이 문화나 예술(사)를 주제로 논문들이었다.

동남아 관련 논문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 학술지와 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연구 학술지에도 가끔씩 출판되고 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1958년에 창간한 『아세아문제』, 서강대 동아연구소가 1982년에 창간한 『동아연구』,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4년 전에 창간한 『아시아리뷰』는 (동)아시아연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이며,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국제·지역연구』, 한국외대와 국제지역학회가 같은 이름으로 발간하는 두 종의 다른 『국제지역연구』 그리고 이 두 대학이 영문으로 발간하는 학술지는 세계 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역연구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동아연구』를 제외한 다른 학술지들은 동남아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한국의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로서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아세아문제』는 지난 57년 동안 출판된 1500여 편의 논문 중 동남아 관련 논문은 46편에 불과하여 매년 평균 1편이 실리지 않았던 셈이다. 한편 『아시아리뷰』는 2011년 이후 4년 반 동안 동남아를 주제로

3)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가 발간하는 『동남아연구』는 국내에서 출판된 총 논문 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남아전문 학술지이지만, 과대 대표성을 포함한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가 있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학술지는 아래 제5절에서 제시하는 I-B나 II-B의 대안적 유형에 속하는 연구를 찾아내기가 다른 학술지들보다 더 힘들다는 점에서 『동남아연구』를 제외한 것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결론의 신뢰성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한 논문을 총 9편 실었으나 이 중 5편이 연구동향을 다룬 글이고, 순수 연구논문은 4편으로 모두 창간호와 그 다음 호에 실렸다.

<표 3> 지역연구 학술지 게재 동남아 논문

	『동남아시아연구』 (한국동남아학회)	『동아연구』 (서강대 동아연)	『아세아연구』 (고려대 아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한국외대국제연)	『국제지역연구』 (서울대국제대학원)	『수완나부미』 (부산대 동남아지역원)	『아시아리뷰』 (서울대 아시아연)	소계
1990-94	29	0	14	-	-	7	-	-	50
1995-99	45	1	1	-	2	1	-	-	50
2000-04	91	13	7	10	3	0	-	-	124
2005-09	83	27	9	5	3	5	7	-	139
2010-14	132	24	3	8	15	4	10	9	205
소계	380	65	34	23	23	17	17	9	572

출처: 필자의 집계.

그러나 인문사회분야 분과학문 학회들이 간행하는 기관지는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⁴⁾ 국내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는 분과학문 학술지에 지금까지 게재된 동남아 관련 논문은 일반 지역연구 학술지에 비해서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편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는 동남아연구에 대한 한국의 기성 인문사회과학계의 빈약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4) 대표적인 학술지로는 정치학 분야의 양대 학회의 학술지인 『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 문화인류학 분야의 대표적인 두 학술지 『비교문화연구』와 『한국문화인류학』, 동남아 역사 전공자들이 기고하는 『역사학보』와 『동양사학연구』, 경제학 분야의 『국제경제연구』나 『국제통상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분과학문 대표 학술지에서는 분야 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남아관련 논문을 찾기가 힘들었다. 또한 여기에 실린 소수의 논문들이야말로 II-A의 전형들로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IV. 질적 평가 I: 학술적 기여

다음 두 절에 걸쳐 한국 동남아연구가 지난 4반세기 동안 축적한 연구성과를 기존의 분석들보다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질적 평가를 연구자가 특정 연구성과물을 통해 만들어 내거나 부가한 ‘가치’에 대한 평가로 규정한다. 동남아연구를 포함한 지역연구가 생산하는 가치가 우리의 학문적 탐구활동이 획득하고자 하는 일반적 가치와 다를 수 없다면, 일단 그 가치를 ‘학술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인문학이나 자연과학과 같이 순수학문에 비해 현재적, 응용적, 학제적 성격이 강한 지역연구는 실용성이나 실천성과 같은 현실적 가치의 측면이 특히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학술적 가치는 사회과학의 경우 특정 연구성과가 일반이론의 구축이나 수정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했는가하는 이론적 함의와 방법론적 타당성에 의해 평가되고, 인문학의 경우는 새로운 사실, 자료, 현상, 개념을 발견, 이해, 해석, 기술한 일련의 작업이 보여주는 독창성과 논리력에 의해 평가된다. 일반이론 지향적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학술적 가치를 획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반면, 해석학적 전통을 가진 인문학은 여러 수준에서 학문적 기여가 가능하나 평가의 객관성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학술적 평가 작업을 각 분과학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여 각 전공자들에게 맡겨두자고 제안한다. 근대학문의 탄생 이래 여러 분과학문으로 분화해 오면서 독자적인 연구영역, 이론, 방법론을 확립해 온 만큼,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질적 평가는 각 분야의 고유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비평가들이 가한 간단한 비판을 인용해 두는 것으

로 학술적 평가를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분야의 연구들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고 또 많은 연구성과물을 생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제시한 학술적 가치의 생산이란 측면에서 비평가들의 평가는 공히 인색하다. 박승우(2009: 250)는 한국의 지역연구가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정태적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의 경우, “정책보고서와 ‘정책지향성’이 강한 논문”들과 “총론적 성격의 연구”가 압도하여 “어떤 결과물을 연구라고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정도이며(박번순 2011), 신진학자 나희량(2012: 53-54)도 극히 소수의 연구만이 “현재 주류 경제학의 일반적 방법론이 되다시피 한 계량경제학 모델에 근거한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적 현상을 관류하는 경제적 인과관계에 대한 미시적 단위의 연구”가 부족한 방법론적, 이론적 무의식을 비판하고 있다.⁵⁾ 일반적으로 민족지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인류학 분야라고 하지만, 한국의 인류학자들에 의한 동남아연구가 “이론적 논의의 아젠다”와 “비교문화 연구”를 “결여”하고 있고 지적한 오명석도 비슷한 불만을 나타내었다(오명석 외 2008).

역사학, 어문학, 민족지적 인류학이 주도하고 있는 인문학 분야는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가 쉽지 않다. 실증주의 전통이 강한 역사학과 민족지가 주도하는 인류학 분야의 연구가 만들어내는 가치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고 미답의 필드나 문화현상을 조사하는 한, 그 대소가 문제될 뿐이지 사실발견적 기여는 항상 인정된다. 이들 분야에 대한 학술적 가치 평가는 전적으로 전공자에게 맡길 수

5) 나희량(2012)의 비판은 수리 모형과 계량적 분석을 선호하는 주류 경제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다른 분야의 지역연구자들도 그 비판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지역연구자들이 여러 분과학문과 친화적인 연구방법을 모두 익혀야 하는지, 다른 분과학문의 연구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지는 논쟁 거리가 될 수 있다.

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기존의 비평논문들 중에서는 엄격한 자체평가를 시도한 분석을 찾아 볼 수 없다. 역사학자들은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를 대상국가와 주제 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소개하는 성실함이 돋보이지만, 개별적인 연구자와 연구성과물에 대한 질적 평가는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이 스스로 내리는 최소한 자체비판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일부의 동남아 역사연구자들이 문헌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2차 자료에만 의지하여 논문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점”과(윤대영 2008: 382) 자신의 전공국가를 넘어 타국의 역사 연구로 “외도”하는 행위(오명석 외 2008: 360-361에서 한 최병욱의 토론)를 언급한 정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각 분야의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비평가들은 그 물이론적 연구경향과 방법론적 무의식을 공히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비평자도 어느 연구자의 어느 연구성과물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하고 엄격하며 이론적으로 함의가 풍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다. 이에 필자는 동남아연구에 참여하고 인문사회과학의 제 분야의 전공자들에게 이제는 좀 더 심층적이고 냉정하게 그리고 더욱 더 활발하게 동료자들의 연구성과물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에 나서자고 제안한다.

V. 질적평가 II: 현실적 기여

각 분과학문이 지역연구 성과에 대해 내리는 학술적 평가와 달리 구체적 연구가 창출하는 현실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전공영역과 비교적 무관하게 누구라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실질적 효과, 기대 효과, 부수 효과, 외부효과 등을 측정하는 계량적 평가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고 영역에 따라 가치평가나 경영평가와

같은 도구가 실제로 개발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계량적 접근은 필자의 관심과 역량을 넘어서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패권적 연구’의 담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제안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바는 조작단계에 이르진 못하겠지만 개념화의 수준과 단계에서 현실적 효과를 가능해 보는 것이다. 즉 특정의 연구가 지역연구적 접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와 해결해보고자 던진 문제가 ‘인류보편의 가치’ 실현과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표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가 무엇이나는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만, 개인적 자유와 권리, 사회경제적 복리와 평등, 정치적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개인과 사회에게 필수불가결한 공공선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현실적 가치 평가를 위한 지역연구 분류

	문제해결형 (I)	기초학문형 (II)
현실지향적, 현실수용적 (A)	정책연구 전략연구 보고서 및 안내서	가치중립적 사회과학적 연구 가치상대주의적 인문학적 연구
현실비판적, 대안적 (B)	대안연구 행동지향적 연구	가치지향적, 비판적 연구

필자는 지역연구가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잣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의 연구성과물들을 이 두 잣대로 평가해 보면, <표 4>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해진다. 첫째는 특정 연구가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연구인 가 아니면 실용적, 응용적 연구를 위해 지역연구의 기초지식을 제공

하기 위한 연구인가 하는 연구의 목적을 평가하는 잣대이다. 둘째는 그 연구가 기존의 패러다임, 관점, 권력, 이해관계를 수용하거나 정당화하는 연구인가 아니면 이에 도전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인가 하는 연구의 성격에 근거한 구분이다.

문제해결형 연구는 실용성과 직결되어 기존의 틀과 방식을 고수하거나 부분적,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가치를 증식하고자 하는 건설적이고 현실 지향적, 순응적, 수용적인 연구(I-A)와 기존의 틀과 방식을 전반적 내지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치를 재분배하고자 하는 현실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연구(I-B)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초학문형 연구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적 탐구 활동으로서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그 인과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설명적 사회과학적 연구와 새로운 사건, 현상, 사실을 기존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해석적 인문학적 연구를 포괄하는 정통적 주류적 경향의 지역연구(II-A)와 이러한 패권적 사고를 비판, 부정, 해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대안적이고 도전적인 지역연구(II-B)로 분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이념형적 분류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안 된다. ‘기초학문형’ 지역연구가 설사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중시한다 할지라도 지역연구의 한 유형인 이상, 현실의 발전이나 개선, 개혁이나 구제와 같은 실용적 목표에 봉사할 때 지역연구로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분과학문이나 사물과 현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연구방법론, 고전문학, 철학, 미학 등은 지역연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단행본과 학술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학문형 동남아연구서로 볼 수 있는 단행본의 수는 극히 희소하여 통계를 낸다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이다. 동남아관련 서적이 가장

많이 출판된 2013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같은 해 출판된 총 133권의 단행본과 보고서 중에 학술적 제목을 가진 것은 많이 잡아도 15권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동남아전문가가 저술한 연구서는 대역섯 권에 불과하였다. 시장진출, 개발원조, 사회경제협력을 겨냥한 조사, 전략, 정책 보고서가 50여권에 달하고, 관광, 이민, 선교활동, 유학 등을 위한 안내서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정부, 기업인, 소비자, 관광객을 위한 출판이 80%에 육박한다. 최근으로 올수록 학술적 서적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까닭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협력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동남아 각국의 기초 정보를 담은 소개서와 전략과 정책을 다룬 보고서가 급증한 반면, 제한된 동남아전문가에 의한 저술은 더디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해서 동남아에 대한 학술적 연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동남아전공 학자들은 요즈음 대학 및 연구자 평가 방식에 쫓아 단행본 출판보다 논문 출판을 훨씬 선호하여 지난 20여년 만에 학술논문 수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사실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동남아전문가에 의한 학술적 연구는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제, 경영학 관련 논문과 외교, 개발, 사회문화협력 관련 논문이 30% 정도 차지하는 것은 한국의 동남아 전문가의 수 대비 매우 높은 비율이고, 이는 동남아연구의 패권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현실지향적 문제해결형 연구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나머지 기초학문형 연구를 보더라도 비판적, 대안적 성격을 띤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을 지금까지 축적된 동남아연구에 적용하여 그 현실적 가치를 따져본다. 다만 필자의 연구가 동남아전공 학자들과 소통을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논의의 초점을 유형 II-A, 즉 현실수용적 기초학문형 동남아연구에 맞출 것이다.

1. 유형 I-A: 현실지향적 문제해결형 동남아연구

신뢰할만한 자료를 엄격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책연구의 경우는 정당한 연구일 뿐 아니라, 그 문제해결적 능력과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다수 지역연구들이 특정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좋은 사례나 일탈적 사례를 방법론적으로 숙고하여 선정, 연구하면, 궁극적으로 비교연구에 못지않게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하다. 미국에서 정치학을 위시한 사회과학이 20세기 중반 지나친 계량화로 적실성(relevance)을 잃고 말았다는 자성에서 출발했던 후기행태주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강조했는데, 학제적 접근을 강조한 지역연구가 1970년대 이후 재조명된 것도 바로 그 문제해결 능력 덕분이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지역과 외국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히 증대되었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수집의 수준을 넘어서는 본격적인 지역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김영삼정부의 “세계화전략”, 김대중정부의 “동아시아평화구상”,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중심(협력)시대”, 이명박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등 민주화 이후 출범한 모든 정부가 외국, 특히 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 동안 정부와 기업이 출연한 연구재단들의 주관 하에 시행된 연구비 지원책들도 궁극적으로는 국력 신장과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시아를 강조한 일련의 외교정책 덕분에 동남아는 중국과 함께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유감스럽게도 1990년대 들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해외 국가와 시장에 대한 기초연구나 정책 및 전략 연구들은 대개 국책 및 민간 연구소의 비동남아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정부출연 국책연구소들과 금융기관, 국영기업, 대기업 부속 연구소들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에 주된 관심을 가진 것은 설립 목적에 충실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⁶⁾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정책 및 전략 연구는 동남아연구에 있어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영, 정치, 외교, 문화 분야에 걸쳐 폭넓게 수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기초정보를 담은 소개서, 각종 통계나 법령 따위를 묶은 자료집, 정치적, 경제적 사정, 현황, 추세 등을 조사, 수집한 자료집 수준의 시장조사 보고서나 정세 보고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남아가 한국인들에게 여러 측면으로 가까워지면서, 이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대된 결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내서 성격의 각종 서적이 상업적 출판사의 기획이나 번역에 의해 출판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유의 비학술적, 비전문적 출판물이 국내 서점을 통해 유통되는 동남아 관련 서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외교적 교섭력, 국제 경쟁력, 제조상품 및 문화상품 수출, 국가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전략, 방안을 제시한 정책지향적 동남아연구가 비록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긴 했으나, 이 유형은 국가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였으며 양적으로 다른 유형을 압도했다는 점에서 ‘패권적’ 유형의 동남아연구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지역연구가 그 수준과 깊이를 강조하면서 조금씩 정책지향형에서 기초학문형으로 옮겨가고 있고, 정부의 지원

6) 동남아 경제 분야의 연구성과물들을 검토한 박문순(2011: 235 표 참조)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발표된 198편 중 보고서 형태를 띤 것이 무려 98편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책도 지역연구의 기초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 대한 실용적 연구라고 하는 지역연구 본연의 임무는 항상 강조될 것이다. 좋은 싫든 정책지향적인 연구는 앞으로도 한국의 지역연구와 동남아연구의 주무이자 본령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순응적 문제해결형 동남아연구는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룩한 공적만큼이나 비판의 소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첫째, 대다수 정책, 전략 연구가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다 보니, 동남아의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맥락에 대한 이해나 고려가 없는 결론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정책성 연구는 정책집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급한 결론은 돈을 낭비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 둘째, 상업적 출판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무분별한 동남아 관련 서적의 범람은 동남아를 단순한 호기심과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불어 세계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미래를 건설할 전략적 동반자로서 동남아를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릇된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 셋째, 연구비와 시장에 의존한 동남아연구는 한국의 국가, 자본, 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책성 연구비에 의해 추동된 동남아연구는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겸비한 진정한 학문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만 몇 가지 열거해 보았다.

가시적이고 양적 측면에서 현실지향적 문제해결형 연구는 한국의 동남아연구 경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패권적이다. 단행본 출판을 비전문가들과 상업적 출판사에 내 준 동남아전공 학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지역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쉽사리 늘어나지 않는 한국의 학문적 풍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진지하고 심각한 연구자적 태도와 문제의식으로 무장하여 동남

아의 현안과 문제에 도전하는 풍토가 아쉽다.

2. 유형 I-B: 현실비판적 문제해결형 동남아연구

현재 동남아를 구성하는 11개국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민주주의 보다는 권위주의, 정책 투명성보다는 부패,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성장보다는 불균형적이고 배제적인 성장, 사회경제적 평등보다는 불평등, 문화적 화합보다는 갈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역협력체인 아세안도 일반인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의사는 무시된 채, 정부와 엘리트들 간의 ‘공모’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크다. 한국과 동남아 간의 관계 역시 외교관들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공히 찬사를 보낼 만큼 완벽하게 조화롭고 평등한 관계는 아닐 것이다.

한국의 동남아연구자들도 그 수가 늘어나면서, 동남아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과 한국과 동남아 간의 다각적 관계에 연구관심을 넓혀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개별적, 집합적으로 안고 있는 모순과 당면한 문제점들을 실천적으로 파고 든 연구자는 희소하다. 만약 연구자가 한국이나 한국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현지인, 그것도 현지의 다수 대중이나 서민의 입장에서, 나아가 소외당한 소수나 빈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형 연구를 모색해 본다면 앞서 논의한 패권적 경향의 현실순응적인 정책성 연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다.

비록 혁명의 시대는 갔다 할지라도 거의 모든 동남아의 국가와 사회는 혁명에 버금가는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인, 집단, 마을과 같은 소규모 단위에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천을

필요로 하는 연구거리는 무한하다고 할 것이다. 이 무한한 문제들 중에서 동남아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주목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베트남전 파병, 해외진출 현지투자기업에서의 노사관계, 국내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 동남아인들이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한국 기업의 산림개발, 압제적이고 부패한 현지 국가와 한국 기업의 결탁 등 한국과 관련된 문제와 동티모르 독립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군인들과 민병대들이 저지른 만행, 태국 왕실의 부패와 반민주적 행태, 싱가포르 번영의 허구, 서민들에 대한 미소신용 (microcredit), 도시 빈민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입장이 개진되고 대책이 나름대로 제시되기는 했으나, 이 유형의 동남아연구는 대부분 동남아전공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보다는 실천적 참여활동을 통해서, 또는 학자들보다는 행동지향적인 연대운동 단체나 운동가의 고발이나 보고에 의해 이루어졌다.⁷⁾

그러나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그리고 한-동남아관계가 은폐하고 있는 불의와 모순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심층적인 연구의 뒷받침 없이 실천과 운동의 차원에서만 강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뢰할만한 정보, 탄탄한 지식과 객관적 분석 없이 선불리 행동에 나서는 것은 무모하다. 행동과 실천이 지식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출 때만이 대안적 문제해결형 동남아연구는 완성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동남아 전문가나 연구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동남아 국가 모두가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개방 그리고 아세안공동체란 이름하에 거대한 단일시장 형성에 매진하고 있는 이 때, 비판적, 대안적 문제해결형 연구의

7) 동남아전공 학자들의 현실 참여는 다른 지역을 전공하는 학자들보다 크게 두드러진다. 국내 국제연대 운동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국제 캠페인에 동참하며, 동남아 현안에 대해 시론을 기고하고, 국제구호활동에 기부하는 동남아 연구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 참여는 단순한 행동에 머물지 않고 학술적 연구로 체계화, 승화시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준 전제성교수에게 감사한다.

부족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3. 유형 II-A: 현실순응적 기초학문형 동남아연구

(1) 구분

기초학문형 지역연구는 문제해결형과 달리 연구대상이 되는 국가나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서한걸음 물러나,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나 배경 지식을 체계화, 심화하려는 학문적 탐구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에 속한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분과학문들이 취해 온 접근법이나 연구방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문제해결형 연구가 구체적인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기초학문형 지역연구는 제한적 일반화와 좀 더 보편적인 적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론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한국의 동남아전문가들은 대부분 연구자의 본분에 충실한 사회과학자와 인문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연구자의 본분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학문의 주된 흐름이 제공하는 주류적 관점, 담론, 이론, 방법론을 따르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동남아전공 학자들도 여타 인문사회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패권적 학풍’ 또는 “지식권력적 패권”을 받아들이는 학문적 보수주의자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동남아관련 국내 출판물 시장은 동남아를 전공하지 않는 비전문가와 출판사를 위해 일하는 “전문번역인”과 “작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면, 인문사회계통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대부분 동남아전공 자들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시장지향적 출판물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 동남아연구라는 학문적

영역과 거기서 생산되는 담론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패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과학적 동남아연구와 인문학적 동남아연구

설명과 예측을 목표로 삼는 사회과학적 동남아연구는 주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각자의 분과학문에서 통용되는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존하여 현지 지역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현상(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동남아연구의 학문적 가치 평가를 논하면서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이론적 함의와 방법론적 엄격성의 측면에서 높은 질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연구들 절대다수는 변인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통계분석이나 비교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고(신윤환 1998), “계량경제학모델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지만(나희량 2012: 53),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만 일반화와 이론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실증주의의 입장은 고수한다.

현실순응적 기초학문형 지역연구들 중 적지 않은 연구가 현안들이나 사회문제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다루면서 정책적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각국의 정치와 사회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거나 비교한 사회과학자들은 관료적 정치와 과두제의 엘리트주의적 전통, 권위주의적 체제와 공고화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고착성, 낮은 계층적 이동성, 구조화된 부패와 정경유착, 차별적인 화인정책, 과거사 청산의 회피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이런 연구들조차도 주된 연구의 목표는 사회현상의 인과성을 찾아내는 설명과 예측에 두고, 그런 이론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에 의존해야 한다는 “가치중립”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질적으로 평가할 때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해석적 기초학문형 지역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 민족지적 인류학, 어문학 등 인문학이 주도하는 이 유형은 새로운 연구대상 즉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분석되지 않은 현상이나 사실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연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해를 위한 해석에 의존하는 분석은 논리력이나 통찰력을 필요로 하지만 경험적 방법처럼 연구결과를 기각할 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단점?)을 갖고 있다.

사회과학적 지역연구가 연구의 각 단계마다 오류의 위험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개념화, 조작, 자료의 수집과 처리, 분석의 번거롭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집적자료와 같이 큰 데이터셋을 취급해야 하며, 가설 검증을 위해 수준 높은 분석기법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달리, 해석적 지역연구는 자료를 찾고 만드는 일이 시간과 노동을 요하지만, 분석과 해석은 객관적 검증프로세스가 없다는 점에서 연구자 개인의 설득력과 수사학이 중시된다. 또한 해석적 지역연구가 창출하는 연구가치는 국제 학계에서도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이점들 덕분에 우리의 역사학자와 문화인류학자들은 그 적은 연구자 수에 비하여 연구의 생산성이 높으며 일부 학자들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성과를 얻어 내기도 했다. 그 연구주제도 한국인 동남아연구자들의 고유한 연구영역과 한국과 동남아 간의 교류, 협력, 관계만이 아니라 현지 국가의 문화나 역사에서도 찾아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까닭에, 동남아 지역을 관통하는 현상이나 긴 시간에 걸친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는 비교역사적, 비교문화적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의 인문학적 지역연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3) 패권적 동남아 담론의 형성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지배해 온 이러한 가치중립적, 보수적 경향은 연구자들 사이에 ‘패권적 동남아 담론’을 확산시켰다. 그 패권적 담론은 동남아연구자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동남아와 한-동남아 관계를 분석하고 대안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설계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 학자들의 동남아 담론은 아래 두 가지 내용을 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동남아전공 사회과학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담론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동남아에도 전파된 이 담론은 시장경제와 이를 구축,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작은 정부를 옹호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중시했던 고전파경제학의 영향을 짙게 받은 신자유주의는 동남아와 같은 ‘주변부’에 이르면 “역사의 종언”을 보장하는 “시대정신”으로 치부되어 월가점령(Occupy Wall Street) 같은 시위나 운동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주변화’되고 말았다. 원래 자유주의나 후쿠야마의 담론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종국적 승리도 예언하였으나,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시장 앞에 민주주의 정치는 부수적인 장식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 사조는 동남아 각국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만들어내었을 뿐 아니라, 아세안 역내, 역외 경제 협력과 통합을 부추겨왔다.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성장, 협력, 통합의 이론적 근거는 상호 연계된 다양한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고전파와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을 필두로, 국제경제학의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과 무역상보성(trade complementarity), 국제정치경제학의 상호의존론(interdependence) 등은 공히 경제에 있어 시장, 성장, 개방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성장정책과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야기할 수 있는 계층 간 불평등, 부문 간 불균형,

경제외적 외부불경제에 대한 연구에 인색하다. 1987년 금융위기와 2007-8년 세계경제위기에 당면한 말레이시아나 일부 동남아국가가 어떻게 반시장적, 반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연구하지 않았다.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아세안 창립국들은 좀 더 완전한 시장경제를 향한 자유화를, 인도차이나 3국과 미얀마는 자본주의를 향한 개방과 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해 왔다. 동시에 아세안의 경제적 선발국과 후발국들은 최근 20년 동안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여 드디어 아세안공동체 선포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한국뿐 만 아니라 전세계의 동남아전공자들, 특히 경제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은 동남아 경제의 개혁과 개방, 지역통합, 나아가 동북아 경제와의 협력에 일치되고 일관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동남아연구자들이 아세안의 국제관계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동남아정치를 비판하는 것이 민족자결권을 해치는 내정간섭으로, 이른바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의 허구를 파헤치는 것은 약소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패권주의라는 오해를 부를까 두려워, 비판적이거나 객관적인 분석을 꺼리는지 모르겠다. 대외교섭력과 경제력이 약한 아세안과 동남아를 특별히 배려해야한다는 아세안중심성의 논리는 한국 학자들의 기초학문형 연구에서도 묻어 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정치학 전공자들은 통합을 향한 아세안의 대내적, 대외적 협력이 국가중심적, 엘리트중심적 참여와 결정에 의존하고, 불평등과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학자는 드물다.

두 번째 담론은 특수주의 담론이다. 역사학에서 기원한 이 담론은 문화적으로는 상대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족자결주의와 인식론적 근거 및 가치론적 입장을 공유한다. 흥미로운 점은 신자유주의가 경제

와 국경을 뛰어넘는 초국가적, 범세계적 보편성을 표방한다면, 이 특수주의 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체론적 개별성을 중시하여, 일국적, 민족적, 지방적, 개체적 특성과 자율성을 부각시킨다. 일견 신자유주의의 보편적 담론과 모순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수주의 담론은, 세계화가 거대한 물결로 밀어닥치는 현실 속에서 신자유주의와 계서적(hierarchical)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역사적 특수성, 문화적 상대성, 정치적 자율성의 구현은 모두 신자유주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뿐이다.

한국의 역사 전공 동남아연구자들은 실증주의 역사학이 부과한 본연의 임무인 새로운 역사적 사실의 발견과 해석에 주력하면서, 개별국가의 통사를 서술적으로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인류학 전공 동남아연구자들은 현지조사를 통해 발견한 개별적 문화 현상과 특질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 개별국가와 아세안을 연구하는 비교, 국제 정치학자들은 대체로 동남아와 아세안의 사례를 일탈적 사례(deviant case)로 취급하여 특수한 처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의 동남아전공자들은 오리엔탈리즘, 자민족중심주의, 제국주의 등 과거 한국과 한국인들을 옥죄었던 편견과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는 예방적 노력이 과도한 탓인지, 철저히 상대주의적이고 내재적인 접근을 통해 동남아의 역사, 문화, 정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문헌연구나 참여관찰이 필수적인 역사연구나 민족지적 문화연구가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발견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만들어 내는 일차자료만 고집하는 것은 역사적 사례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경시함으로써 일반화를 도모하는 이론지향적 연구의 출현을 어렵게 한다. 2차자료 의존, 비전공자 연구, 문헌학이나 현지조사방법을 훈련 받지 않은 자들의 연구, 이론지향적 비교연구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역사학계의 풍토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이 편협한 민족사관으로 재구성한 역사를 내재적 접근이란 명분을 내세워 비판 없이 수용하는 태도도 식민사관에 못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가 중국의 역사적 기록과 서구식민주의자들의 오리엔탈리즘적 기술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되었다고 해서, 탈식민화 이후 국가, 엘리트, 다수민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착취와 지배를 용이하기 위해 같은 식으로 역사와 문화를 조작, 왜곡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민족에 의해 토착 국가와 국민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억압받고 사라진 소수민족들의 역사와 문화도 다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4. 유형 II-B: 현실비판적 기초학문형 동남아연구

동남아연구는 지역연구가 정체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 이래, 각 분과학문들의 주류에 도전하여 비판적이면서도 대안적인 사고와 분석을 제시하여 그 독창성을 인정받은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인류학자 기어츠(Clifford Geertz), 정치학자 앤더슨(Benedict Anderson)과 스캇(James C. Scott), 역사학의 리드(Anthony Reid) 등 제1세대 동남아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은 동남아란 지역적 한계와 자신의 분과학문의 경계를 뛰어 넘어 학문적 기여를 인정받은 석학들이지만, 이른바 ‘정통적’ 입장에 바라보면 한결같이 이단이거나 비주류로 비취질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란 지역은 그 지리, 역사, 문화, 정치를 통하여 기성의 패러다임, 관점, 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여지를 그만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동남아연구 또한 해외 동남아학계의 영향인지 동남아 지역이 제공하는 특수한 친화성 때문인지 비판적 사고의 뚜렷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아직도 세계 동남아학계만큼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완성한 학자를 배출한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연구자들이 비판적이고 대안적 연구자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동남아연구자 네트워크 밖에서 활동하는 학구적 행동주의자들에게서 그 단초들이 다소 발견된다. 한국의 보수적 정권들이 벤치마킹하려했던 싱가포르의 발전을 뒤집어 본 이용주(2005), 동남아 권력층의 가면의 벗긴 유재현(2009), 베트남전을 한국사회의 형성요인의 하나로 본 윤충로(2015), “자유통일”을 수호하려 간 줄 알았는데 양민을 학살한 한국군을 폭로한 구수정 (각종 인터뷰와 기고문) 등은 그 증거능력이야 어떻든 한국 학계의 패권적 동남아담론에 도전장을 던진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성공신화가 인도네시아 노동현장에서 ‘한국적 경영방식’으로 간파되고 있음을 고발한 신윤환(1995), 국가나 엘리트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지역통합을 외치는 전제성(2007), 우리 동남아학계에서는 동남아의 정치발전을 “절차적” 민주화가 아니라 인권보장으로 척도를 삼아야 한다고 믿는 박은홍(2009), 한국과 동남아 간의 다양한 만남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종족, 종교, 문화 갈등을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일군의 문화인류학자들 (홍석준, 채수홍, 김민정, 김형준) 등의 연구가 한국동남아연구의 패권적 학풍에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적, 대안적 관점의 소지자들은 수적으로 큰 흐름을 만들어 내거나 독자적인 학문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가 앞서 언급한 갖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와 모순에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한국의 동남아연구자들의 일반적 경향은 아쉬움과 우려를 자아낸다. 인문학적 동남아연구의 경우, 대안적, 비판적 연구의 부재는 더욱 눈에 두드러진다. 동남아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흔히 발견되는 지역적 패권주의나 내부적 식민주의를 비판하거나 동남아의 현지 문화 속에서 가끔 발견되는 반인권적 편린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자민족중심주의, 서구

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의 소치로 보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분화, 특화될 정도로 연구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1980년대까지 한국의 학계에는 비판적인 마르크스주의가 한 줄기를 형성했고, 현재까지도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는 진보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동남아의 현실 속에는 이러한 비판적 사고와 진보적 행동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풍부해 보인다는 점에서, 패권적 담론과 시대적 조류에 휩쓸려 지역연구자의 소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동남아연구자들은 무의식적 지역연구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VI. 맺는 말: 다원주의적 동남아연구공동체를 꿈꾸며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두 갈래로 나뉘어 성장해왔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동남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구하기 위해 찾는 서점과 공공도서관을 채운 동남아관련 출판물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동남아연구로 훈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들 특히 상업적 출판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작가와 전문번역가들이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제조’해 낸 책들이다. 둘째는 대학에 소속된 동남아전공 학자들과 국책 및 민간연구소의 동남아전문가들이 ‘창작’한 연구성과물로서 대부분 학술논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전자의 성격을 띤 동남아 “연구”가 양적으로 압도하면서 동남아 담론을 생산, 확산시켜 왔지만, 동남아전공 연구자들은 그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자는 일관되게 패권적 담론을 구축하는 데 앞장 서 온 반면, 후자에 의한 기초학문형 연구는 어느 정도 다양성을 보이며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남아연구의 패권적 담론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그대로 관철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동남아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대표적인 연구 주제들 중 몇 가지를 꼽는다면, 동남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간의 (주로 경제적) 관계, 그리고 한류 및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연구이다. 첫 번째는 동남아연구 사회과학자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주제이며, 두 번째는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었고, 마지막으로 한류와 동아시아공동체 연구는 특정 분과학문에 전속되지 않고 문화인류학, 커뮤니케이션, 정치학, 사회학, 어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폭넓게 연구되었다. 역사학 분야의 연구성과가 빠져있지만, 서너 명의 연구자들이 한국과 동남아의 역사적 관계라는 공통의 주제를 시기 및 동남아 국가에 따라 적지 않은 편수의 연구를 생산하였다.

필자는 이 몇 가지 연구주제를 다룬 연구성과물로부터 공통적인 논리와 사고의 체계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한국 동남아연구의 패권적 담론’이라고 불렀다. 사회과학적 연구에 대해 ‘신자유주의’ 그리고 인문학적, 민족지적 연구에 대해 ‘특수주의’로 명명할 수 있는 이 담론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구체적인 주장을 만들어 내었다. 첫째, 동남아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긴 역사적 노정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과 위기를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한국과 동남아 간의 관계는 호혜적이며 특히 양자 간 교류와 협력은 상보성(complementarity)이 높은 바람직한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필요로 하고,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연구 담론들이 동남아와 한-동남아 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양자관계의 미래도 담론의 진실을 보장할 것인가? 우리는 이 담론이 과연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단순히

한국인들과 연구자들의 ‘소망스런 생각’(wishful thinking)이 아닌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남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요원하기도 하지만 수정, 변형, 왜곡된 형태가 결코 이행기적이 아닌 반영구적 형태로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 동남아가 변혁과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과 위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항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가 ‘포괄적으로는’ 호혜적이고 상보적이라고 하지만, 결코 공평하고 평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한국이 총교역액의 30% 가까이 되는 엄청난 무역흑자 대박을 내고, 천연자원과 농수산물을 받는 대가로 공산품을 주는 이른바 “불평등한 교환”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한국인과 동남아인은 경영자와 노동자로, 사용자와 피고용인으로, 주인과 운전수나 가정부로, 관광객과 여행가이드로, 남편과 부인으로, 교수와 학생으로, 원조 공여자와 수혜자로 만나는 이 관계가 양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평등하거나 공평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한류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다양한 계층이와 연령층이 환영하고 있는지도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해 볼 일이다. “동아시아공동체”는 한, 중, 일에 그리고 동남아 개별국들에게, 공통된 목표나 이상이 아니라 각자의 정치적 야망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나 명분이 되고 있지 않은지 파헤쳐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동남아의 역사적 국가들 관계는 관심, 존중, 이해가 아니라 무관심, 멸시, 몰이해가 일관되게 지배했던 것은 아닐까? 엄격한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대안적 가설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동남아연구자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연구비, 자민족중심주의, 시류에 포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비는 국가와 기업에 의해 제공되고, 자민족중심주의란 한국인의 강한 민족주의와 근거 없는 자부심의 발로이며, 시류란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이 시대의 사조이자 이념이다. 이러한 환경, 물적 토대, 허위의식

의 힘을 빌려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패권적 담론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동남아 담론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축적된 출판·시장의 동남아관련 서적들과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이 지원한 정책 및 시장 보고서에서 여과 없이 드러날 뿐 아니라, 동남아전문가들의 학술적 연구에도 깊숙이 침투하여 명시적, 암묵적 담론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동남아전문 학자들이 동아시안대운동의 차원에서 동남아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모색하거나, 개별적 수준에서나마 비판적, 대안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현상은 언젠가 백화제방할 한국의 동남아연구의 씨앗이 되고 새싹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동남아 국가들이 당면한 고질적, 구조적 모순들과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동남아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비판적 사고와 대안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부디 패권적 담론의 오류와 위험성을 간파하고 획일적인 시각과 자민족중심주의적 연구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다원주의적 학문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나희량. 2012.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 학술지 분석 및 방향성 모색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2(2): 43-93.
- 박변순. 2011.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 『아시아리뷰』 1(1): 227-258.
- 박승우. 2009.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대한 심층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19(1): 215-275.

- 박은홍. 2009. “동남아시아의 민주화 이후 ‘개발’과 ‘인권’의 갈등적 공존: 시민사회의 시각.” 『동남아시아연구』 19(2): 173-219.
- 신윤환. 1998. “한국의 비교정치연구와 지역연구: 비판적 검토.”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445-467.
- _____. 1995.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한국적 경영 방식’ 이미지 형성과 ‘노동자 담론’의 확산.” 『사회과학연구』 4: 293-335.
- 신윤환·이성형. 1996. “한국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2(1): 155-187.
- 오명석·김형준·최호림·조흥국·최병욱·김영애·박사명·정연식·박은홍·배궁찬·박번순. 2008. “기획좌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연구: 학문분야별 회고와 성찰.” 『동남아시아연구』 18(2): 331-399.
- 유재현. 2009. 『아시아의 오늘을 걷다』. 그린비.
- 윤대영. 2008. “한국 동남아시아 역사연구의 제양상: ‘隱遁’에서 ‘疏通’으로.” 『역사학보』 199: 371-383.
- _____. 2012. “한국 동남아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흐름.” 『역사학보』 215: 329-348.
- 윤충로. 2015. 『베트남전쟁의 한국사회사』. 푸른역사.
- 이용주. 2005. 『신화가 되어버린 싱가포르』. 한국학술정보.
- 전제성. 2006.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동아연구』 50: 109-140.
- _____. 2007. “동남아의 참여적 지역주의와 ‘동아시아공동체.’” 『동남아시아연구』 17(2): 5-40.
- _____. 2010. “비교서평: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정치학계의 기여.” 『국제정치논총』 50(2): 237-249.

- _____. 2014.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현황과 지리학의 기여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4): 379-392.
- 조흥국. 2001. “동남아시아 연구의 문제와 과제.” 『국제지역연구』 5(1): 47-67.
- 조흥국·오명석·박사명. 1998. “동남아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73-115.
- 한국동남아학회. 1992-2014. 『동남아시아연구』. 각권 각호.

(2015.10.31. 투고, 2015.11.10. 심사, 2015.11.16. 게재확정)

<국문초록>

한국의 동남아연구: 반성적 회고

신 윤 환

본 연구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축적된 한국의 동남아연구 성과물들에 대해 일종의 ‘질적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근자에 들어 유사한 평가 작업이 이미 수차례 수행된 적이 있지만, 모두 동남아연구의 양적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구성과물을 주제, 분야, 국가, 연구자의 특성 등에 따라 서술적으로 분류하는 데 그쳤다. 필자의 분석은 이론적, 방법론적 기여도와 독창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각 분과학문의 고유한 영역으로 미뤄두는 대신, 연구성과의 유용성이나 사회적 기여도와 같은 ‘현실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 주제, 내용, 이론적·방법론적 경향과 정책적 함의 등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지역연구의 현실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의 성격 및 목적으로부터 도출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동남아연구의 경우, 절대 다수의 연구성과물들이 동남아와 개별 국가를 소개하는 개설서와 안내서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 보고서들로 이루어진 문제해결형 지역연구였으며, 이는 단행본의 형태로 서점과 공공도서관에서 일반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정책 및 민간 연구소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을 생산하는 자들 대부분이 동남아를 전공하지 않은 연구자나 심지어 연구를 업으로 삼지 않은 일반인, 상업적 작가와 전문번역가

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동남아전공 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기초학문형’ 지역연구들은 주로 동남아, 아시아, 지역전반을 다룬 지역연구 학술지를 통해 학술논문의 형태로 출판되는 데, 대다수 논문이 지배적 담론에 도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입장보다 현실의 권력관계와 지식담론을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한 ‘패권적’ 입장에서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당면한 고질적, 구조적 모순들과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동남아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패권적 담론의 제약을 벗어나 도전적, 비판적, 대안적 연구들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으로 끝을 맺는다.

주제어: 동남아연구, 지역연구, 비판적 연구, 동남아의 정치, 동남아의 국제관계, 동남아의 역사, 동남아의 문화, 지식권력, 담론, 패권, 신자유주의, 특수주의.

<Abstract>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A Critical Reflection

SHIN Yoon Hwan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 of a survey and assessment on the achievements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as reflected in books, reports, and academic papers published for the past quarter century. The study found that the rapid growth of publications on Southeast Asia has followed two different paths, one taken by non-Southeast Asian specialists and often non-academic public authors who write books and reports and the other by Southeast Asianists who concentrate on writing papers for academic journals and edited volumes. The former prevails in quantity, decorates the stacks of bookstores and public libraries, and defines the public image of Southeast Asia, while scholars and specialists in the latter group number less than only a hundred, produce only a few hundred papers a year, and commit themselves to scientific method and value-free research. Despite the divergence, however, the both paths have reinforced each other to create Koreans the dominant discourses of Southeast Asia. The discourses accept and promote the neo-liberalist

view of the state and economy, the autonomy of each nation in handling its domestic politics and policies, the “centrality” of ASEAN in its efforts to integrate the region and to cooperate with its neighbors, and, in particular, the complementary fit of Korea-ASEAN bilateral relations, which in fact concurs with what ASEAN and Southeast Asian and Korean states and economic elites proclaim. The conspicuous lack of critical perspectives characterizes the contemporary discourses of Southeast Asia shared by the Korean public and intellectuals alike, which conceals problems, crises and contradictions facing Southeast Asia today and thereby delays and hinders their solutions. Diversifying perspectives on Southeast Asia and building a pluralist academic community is what Korea’s Southeast Asian studies needs urgently at the current stage.

Key words: Southeast Asian Studies, Area Studies, Critical Theory, Politics of South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Southeast Asia, History of Southeast Asia, Knowledge and Power, Discourse, Hegemony, Neo-Liberalism, Particularism, Relativism